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 효과 및 실효성 제고방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호

목 차

1 연구배경

2 감사의무화 효과 실증분석

3 실효성 제고 방안

1

연구배경

기업 · 감사인 간 제도 효과성에 대한 상반된 평가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의 실효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견해 차

- › (쟁점 1) 내부통제 고도화를 통한 부정 방지에 도움이 되는가?
- › (쟁점 2) 비용 부담이 과도한가?

	기업	회계업계	학계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도입 ▪ 회계정보의 질적 향상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문서화를 위한 업무로 변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의무화한 '19년 이후 횡령 · 배임 발생 빈도 감소 ▪ 인증수준 상향이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부정예방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수준 상향은 횡령 발생 여부와 유의적 관련성 없음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횡령 방지보다 재무제표 산출 과정의 신뢰성 제고가 주 목적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기준 총비용 0.4조 연결기준 총비용 0.25~1조 ▪ 비용 대비 효익 의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컨설팅 비용은 감사보수의 50% 수준 ▪ 감사 투입시간 37%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축 및 운영 과정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및 감사보수의 급격한 증가 등은 제도 수용성을 저하

자료: 아시아경제, “[빛바랜 회계개혁]④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로도 횡령 못막아”, 2023.4.14

내부통제 고도화를 통한 횡령 · 배임 예방의 중요성(1)

○ 자산의 보호 및 부정 방지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한 내부통제의 근원 목표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는 횡령 · 배임 등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포함

- 자산의 편취 · 남용, 부패 등 횡령 · 배임 부정에 대한 기업의 취약점은 재무제표의 중요 왜곡표시 위험과 밀접한 관련성

12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보고정보의 신뢰성 확보목적 중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는 **자산의 보호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또한, **운영목적이나 법규 준수목적** 등 다른 목적과 관련된 내부통제제도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 경우 해당 내부통제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에 포함된다.

13 자산의 보호와 관련된 통제라 함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승인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 사용, 처분을 예방하고 적시에 적발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14 예를 들어, 경영진의 권한남용 및 통제 무시(management override) 위험 등에 대한 **적절한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자료: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2021. 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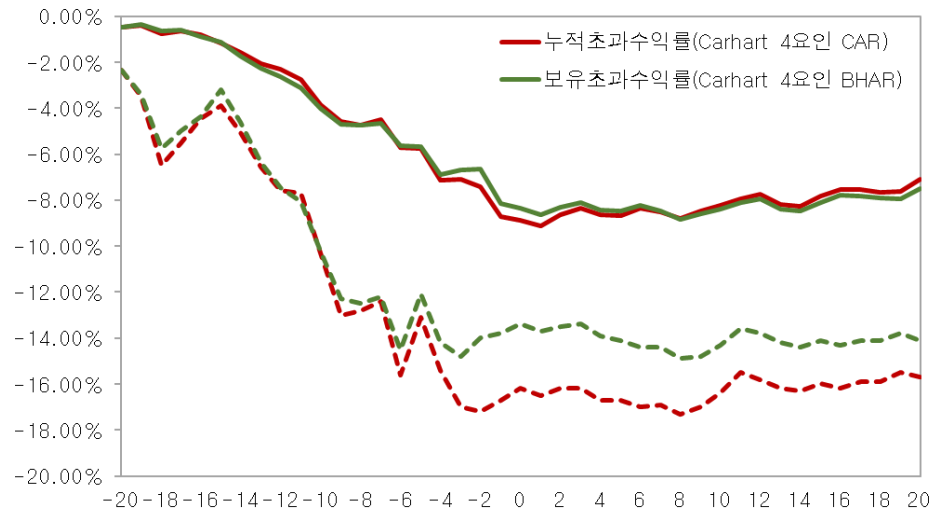
○ 근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면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한 문제

› 횡령 · 배임은 내부 임 · 직원의 중대한 법규 위반이자 가장 근본적인 내부통제절차 위반

내부통제 고도화를 통한 횡령 · 배임 예방의 중요성(2)

- 횡령 · 배임과 같은 내부통제의 무력화는 한 번 발생하면 자산 상실의 직접 손실 뿐 아니라 시장의 신뢰도 하락으로 막대한 평판 손실을 초래

- 최초 횡령 사건 발생일 기준 평균 누적초과수익률: -7.08%
- 자산총액 10% 초과 횡령일 경우의 평균 누적초과수익률: -16.30%



주 : 1) 2016~2021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 12월말 결산 비금융업종 대상
2) 점선은 자산총액 10% 초과 대규모 횡령 표본 분석 결과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적 구축을 통한 극단적 위험의 통제 · 관리 가능 여부는 구축 · 운영 · 감사 수검 등 기업의 이행부담이 상당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부정방지에 무익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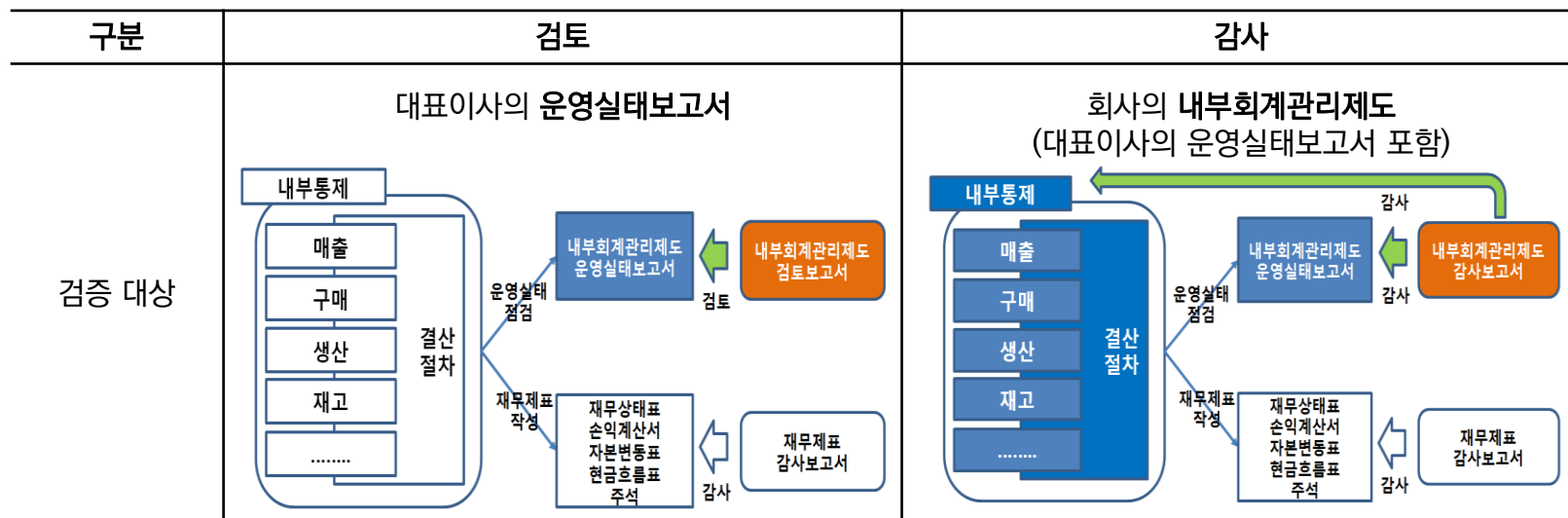
○ 인증수준 상향(검토 → 감사)에 따른 검증대상 확대 및 절차의 고도화

› 외부감사인인 검증대상 확대

- (검토) 경영진이 자체 점검 · 작성한 운영실태보고 문서
- (감사) 경영활동 전반(예: 구매 · 생산 · 매출 등)의 실질적인 내부통제 설계와 운영

› 외부감사인인 검증절차 고도화

- (검토) 업무 담당자와의 질의응답
- (감사) 주요 통제활동의 직접 관찰 및 재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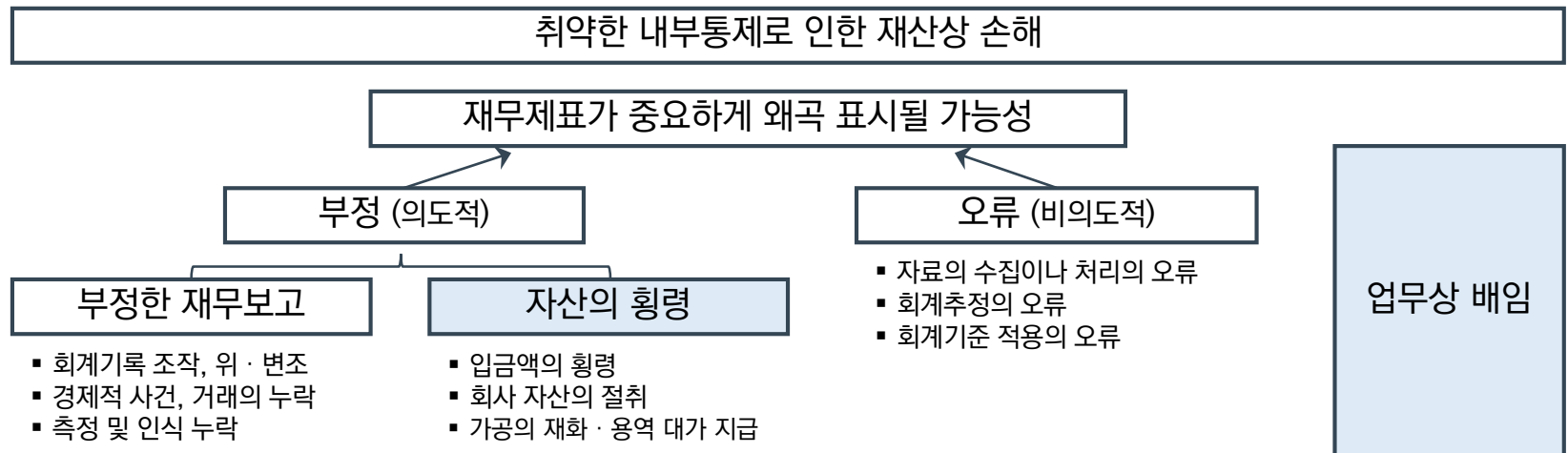
자료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2022. 10. 6.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부정방지에 무익한가? (계속)

- 학계의 여러 연구결과는 경영진이 자체 점검 · 작성한 운영실태보고서를 ‘검토’하는 절차의 **내재적 한계**를 지적
 - › 기업회계기준의 위배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일지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단계에서 회계처리와 관련한 **중요한 취약점 발견이 어려움** (신현걸, 2007)
 - ›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한 기업일수록 횡령 등 부정사건 발생 위험이 높음 (이재은, 2019)
 - › 감사인이 취약점을 발견하여 관련 검토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도 경영진이 이를 즉각 시정하지 않아 차기 횡령 발생 빈도가 높게 관측 (이성욱 등, 2010)
 - › ‘검토’상 중요한 취약점 소멸 이후에도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은 상당기간 미해소 (이세철 · 고영우, 2020)
 - › 전반적인 재무보고품질 개선효과 역시 불확실하거나 제한적 상황에서만 관측 (최종서 · 공경태, 2012; 최준혁 · 허익구, 2016)
- 실질적인 내부통제 위험을 확인 · 평가하기 위해 ‘감사’ 수준의 인증제도 필요성 강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부정방지에 무익한가? (계속)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자산 보호 및 부정 방지 프로그램을 포괄
- 내부회계감사는 절차상 기업의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 실효적 설계 및 운영을 검증
 - ›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수검을 위해 내부통제를 고도화할 가능성이 높음
 - 횡령·배임 사건은 연관된 통제 활동의 부재 혹은 통제의 무력화와 함께 발생하므로, 고도화된 내부통제 환경에서는 이에 대한 예방 효과를 기대 (김영태, 1995; 배한수·권성국, 2015)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적 운영 기업일수록 내부자의 권한을 잘 통제하여 경영진의 특권적 소비행태를 억제 (최성호·김문태, 2017)



자료: 이성욱 등 (2010) 재구성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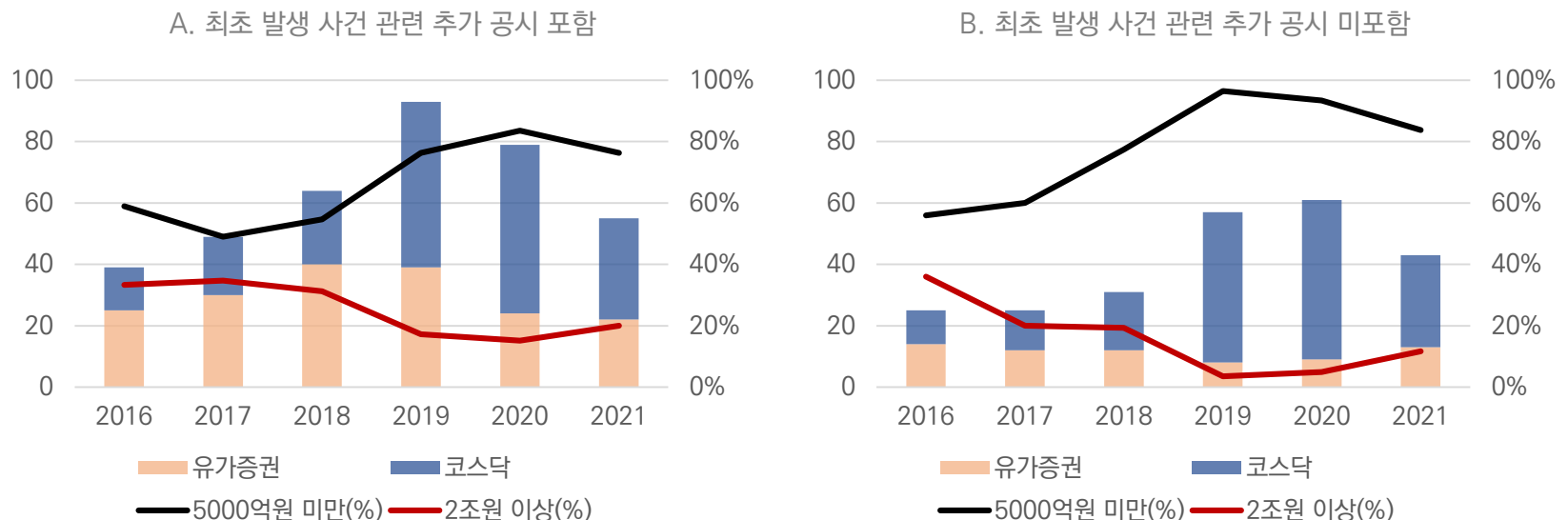
감사의무화 효과 실증분석

감사의무화 전후 횡령 · 배임 발생 추이

○ 감사의무화 이후인 '19년부터 전체적인 횡령 · 배임 사건 발생 감소 추세

- › '19년 이후 전체 건수에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47% 감소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가 내부통제를 고도화하여 횡령 · 배임 발생을 예방할 가능성

연도별 횡령 · 배임 사건 발생 건수 및 기업규모별 비중(%)



주 : 1)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연도별 횡령 · 배임의 혐의 발생 혹은 사실 확인 공시의 건수 및 기업규모별 비중
 2) 확정되지 않은 풍문 또는 보도에 의한 조회 공시 요구, 최초 공시 이후 금액 등의 정정 공시, 무혐의 처분에 의한 공시를 제외하였으며, 별도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연결 자회사 단독으로 횡령 · 배임 사건이 발생한 경우도 제외하여 집계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설계

○ 제도의 단일 시점 시행: 적용 시기 및 대상이 일정한 경우 (예: K-IFRS 도입)

› 전통적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s) 모형이 적합

$$\bullet Y_{i,t} = \alpha_i + \beta_1 Treat_{i,t} + \beta_2 Post_{i,t} + \beta_3 Treat_{i,t} * Post_{i,t} + \epsilon_{i,t}$$

○ 제도의 순차적 시행: 적용 시기 및 대상이 다기간 · 다집단으로 확장하는 경우 (예: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

› 기업 · 연도의 이원고정효과(two-way fixed effects)를 고려하여 일반화한 (generalized) 형태의 순차적 이중차분(Staggered DiD) 모형이 적합

(Roberts & Whited 2013; deHaan 2021)

$$\bullet Y_{i,t} = \beta_1 Treat_{i,t} * Post_{i,t} + \sum \phi Firm_i + \sum \tau Year_t + \epsilon_{i,t}$$

› 명확한 비교를 위해 통제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결과와 포함한 결과를 함께 제시

- 통제변수로는 횡령 · 배임에 관한 임직원의 기회 및 합리화 요인, 외부통제 특성 집합을 고려
(Summers & Sweeney 1998; Choo & Tan 2007; Ettredge et al. 2008)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표본

○ 2016~2021 사업연도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 비금융 기업

표본 선정 기준	기업-연도
최초 표본: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	12,915
(제외 기준)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기업	(248)
금융업(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기타금융)을 영위하는 기업	(762)
주요 분석 변수 및 통제 변수의 구성이 불가능한 기업	(1,078)
최종 표본	10,827

횡령 발생 통제의 유의성: 모형 설정에 따라 다름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는 횡령 발생과 음(-)의 관련성

› 통계적 유의성은 모형 설정(model specification)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인증수준 상향 시 평균적으로 횡령 발생 0.84%p 감소 (10% 유의수준)

횡령 여부	[처치] 2조원 이상 [통제] 5천억원 미만		[처치] 2조원 미만 5천억원 이상 [통제] 5천억원 미만		전체 표본	
	(1)	(2)	(3)	(4)	(5)	(6)
Treat	0.0181** [0.008]	0.0176** [0.009]	-0.0028 [0.003]	-0.0020 [0.003]		
Post	0.0029 [0.002]	0.0013 [0.003]	0.0013 [0.002]	-0.0007 [0.003]		
Treat×Post	-0.0088 [0.011]	-0.0087 [0.011]	-0.0040 [0.004]	-0.0040 [0.004]	-0.0084* [0.004]	-0.0129** [0.005]
Constant	0.0065*** [0.001]	0.0164 [0.015]	0.0076*** [0.001]	0.0195 [0.016]	0.0089*** [0.002]	0.0496 [0.111]
Observations	9534	9534	10141	10141	10840	10827
Adj. R-squared	0.001	0.003	0.000	0.002	0.000	0.030
Controls	No	No	No	No	No	Yes
Fixed Effects	No	Year, Ind	No	Year, Ind	Year, Firm	Year, Fi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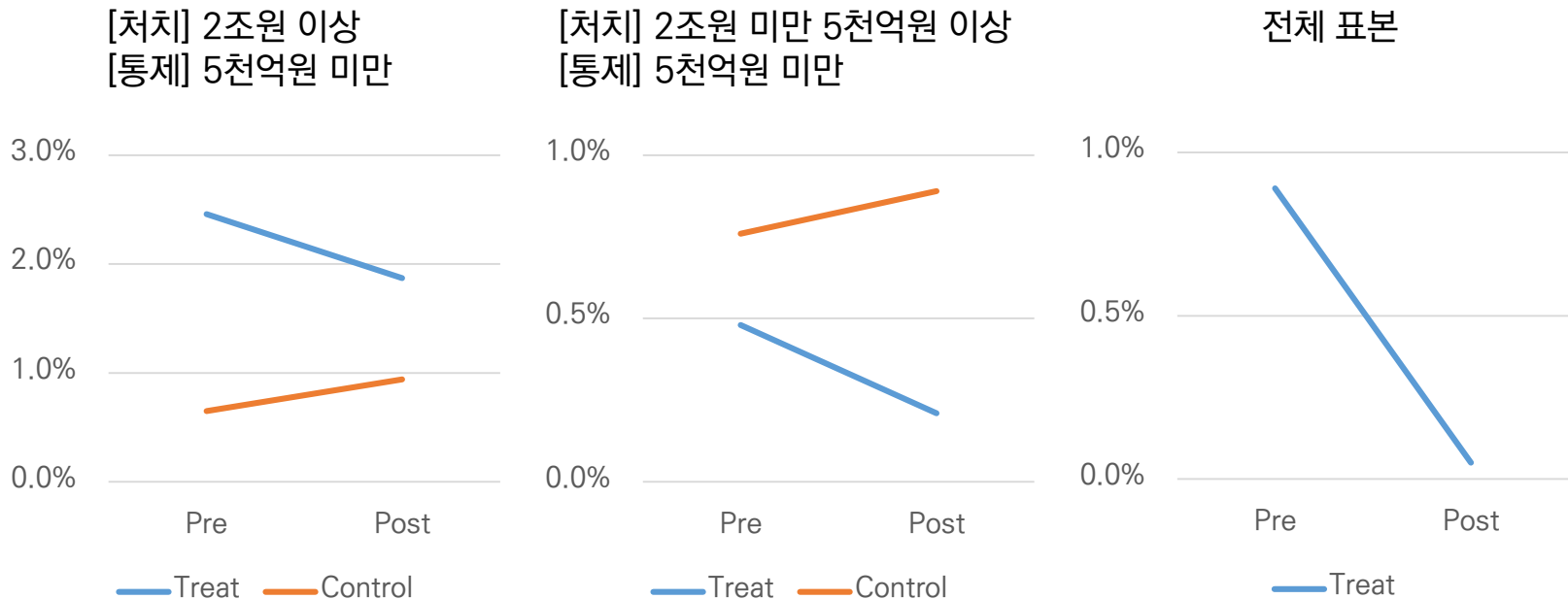
주 : 1) ***,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괄호 안 표준오차는 기업별 오차항의 군집(clustering)에 강건한 방식으로 산출(Petersen, 2009)

횡령 발생 통제 효과의 방향성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는 횡령 발생과 음(-)의 관련성

- › 통계적 유의성은 모형 설정(model specification)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인증수준 상향 시 평균적으로 횡령 발생 0.84%p 감소 (10% 유의수준)



배임 발생 통제의 유의성: 집단에 따라 다름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는 배임 발생과 음(-)의 관련성

- 통계적 유의성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집단에서 강하게 확인
 - 인증수준 상향 시 평균적으로 배임 발생 1.04%p 감소 (5% 유의수준)

배임 여부	[처치] 2조원 이상 [통제] 5천억원 미만		[처치] 2조원 미만 5천억원 이상 [통제] 5천억원 미만		전체 표본	
	(1)	(2)	(3)	(4)	(5)	(6)
Treat	0.0368*** [0.012]	0.0338*** [0.012]	-0.0048** [0.002]	-0.0045* [0.002]		
Post	0.0023 [0.002]	0.0037 [0.003]	0.0007 [0.002]	0.0026 [0.003]		
Treat×Post	-0.0294** [0.013]	-0.0293** [0.013]	-0.0010 [0.003]	-0.0007 [0.003]	-0.0104** [0.005]	-0.0151*** [0.006]
Constant	0.0062*** [0.001]	0.0169 [0.015]	0.0072*** [0.001]	0.0228 [0.016]	0.0075*** [0.002]	0.0807 [0.126]
Observations	9534	9534	10141	10141	10840	10827
Adj. R-squared	0.005	0.007	0.000	0.003	0.000	0.029
Controls	No	No	No	No	No	Yes
Fixed Effects	No	Year, Ind	No	Year, Ind	Year, Firm	Year, Fi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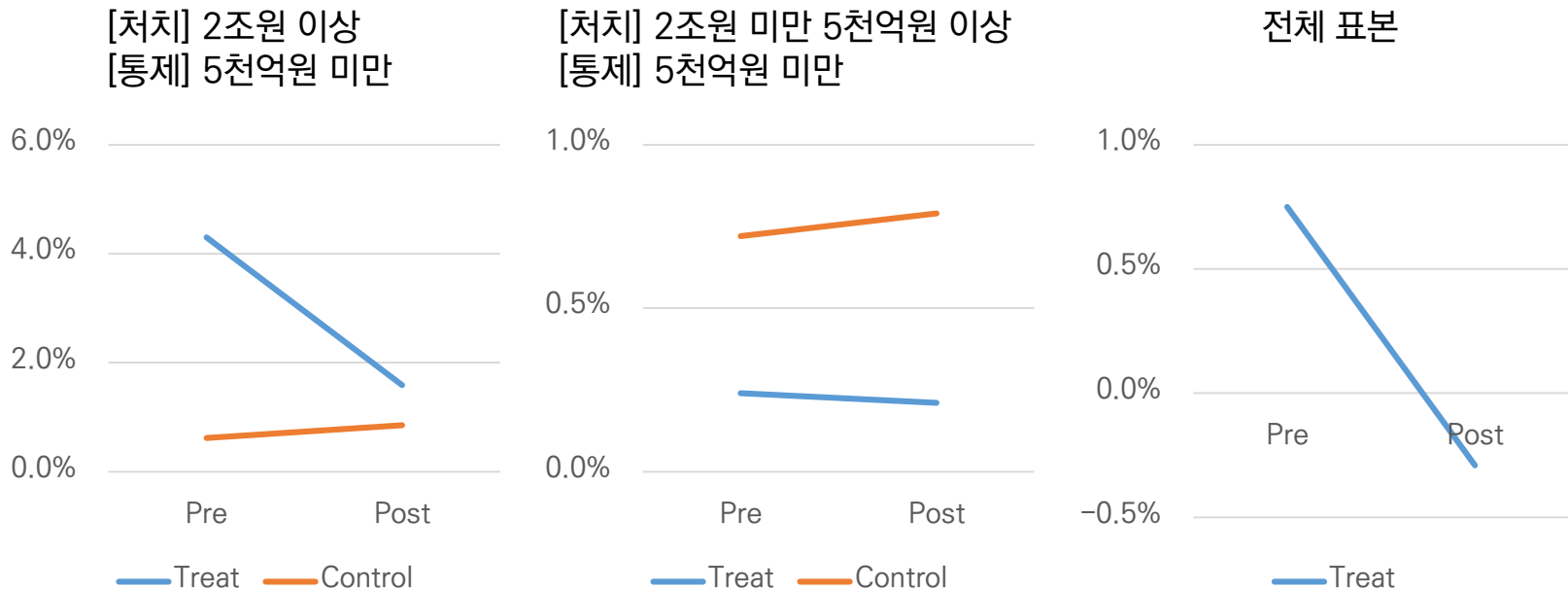
주 : 1) ***,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괄호 안 표준오차는 기업별 오차항의 군집(clustering)에 강건한 방식으로 산출(Petersen, 2009)

배임 발생 통제 효과의 방향성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는 배임 발생과 음(-)의 관련성

- › 통계적 유의성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집단에서 강하게 확인
 - 인증수준 상향 시 평균적으로 배임 발생 1.04%p 감소 (5% 유의수준)



횡령 · 배임 금액 통제의 유의성: 집단에 따라 다름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는 횡령 · 배임 금액 등 부정 규모와 음(-)의 관련성
 - › 통계적 유의성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집단에서 강하게 확인
 - 인증수준 상향 시 평균적으로 횡령 · 배임 규모 1,986만원 감소 (1% 유의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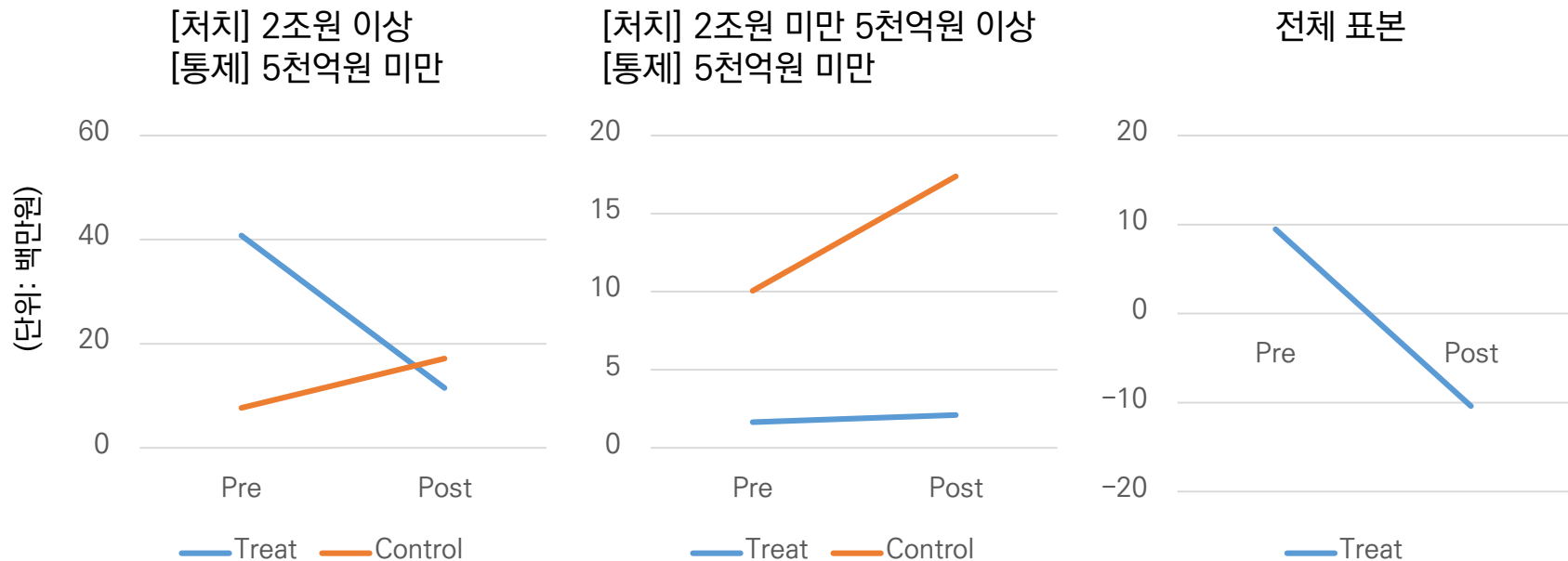
횡령 · 배임 금액 (단위: 백만원)	[처치] 2조원 이상 [통제] 5천억원 미만		[처치] 2조원 미만 5천억원 이상 [통제] 5천억원 미만		전체 표본	
	(1)	(2)	(3)	(4)	(5)	(6)
Treat	33.0912** [13.253]	21.3290 [17.199]	-8.4172*** [2.319]	-5.0241* [2.782]		
Post	9.4654** [3.945]	7.0026 [5.400]	7.3257 [5.496]	2.5688 [4.034]		
Treat×Post	-38.7523*** [14.034]	-36.6142*** [13.855]	-6.8679 [5.969]	-6.0007 [5.391]	-19.8636*** [6.880]	-19.6330*** [6.511]
Constant	7.6801*** [1.605]	61.8584* [35.661]	10.0541*** [1.959]	68.1791* [37.683]	9.4750*** [3.590]	759.6784*** [181.692]
Observations	9534	9534	10141	10141	10840	10827
Adj. R-squared	0.001	0.016	0.000	0.028	0.001	0.555
Controls	No	No	No	No	No	Yes
Fixed Effects	No	Year, Ind	No	Year, Ind	Year, Firm	Year, Firm

주 : 1) ***,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괄호 안 표준오차는 기업별 오차항의 군집(clustering)에 강건한 방식으로 산출(Petersen,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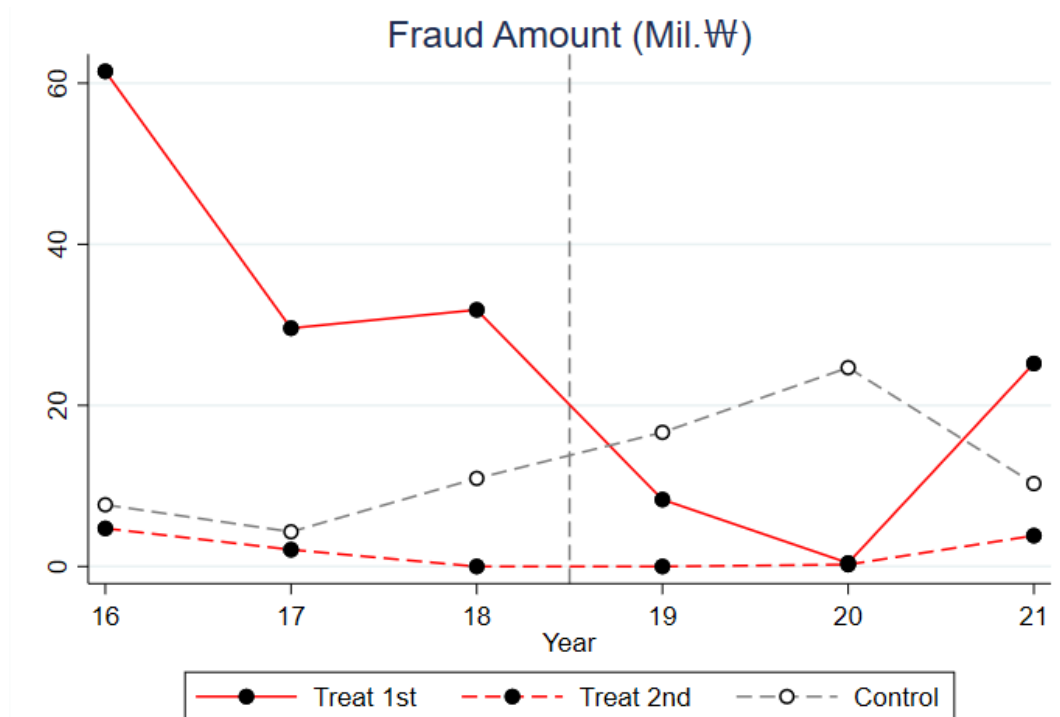
횡령 · 배임 금액 통제 효과의 방향성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는 횡령 · 배임 금액 등 부정 규모와 음(-)의 관련성
 - › 통계적 유의성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집단에서 강하게 확인
 - 인증수준 상향 시 평균적으로 횡령 · 배임 규모 1,986만원 감소 (1% 유의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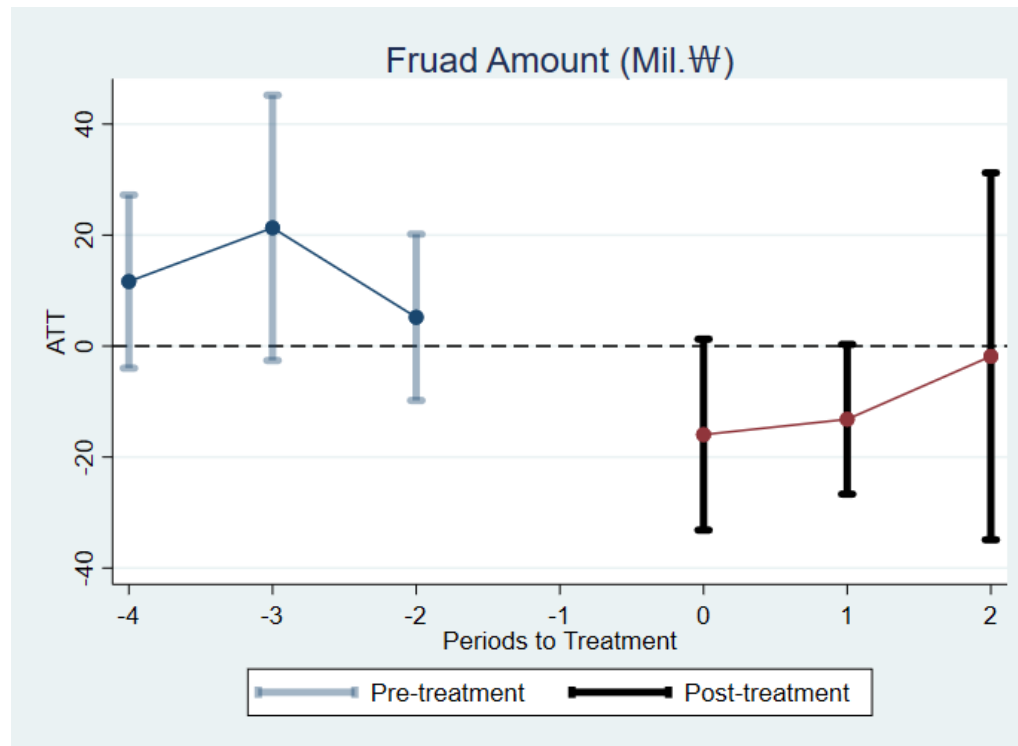
횡령 · 배임 금액 통제 효과의 추이(1)

- 비처치집단(Control)의 경우 횡령 · 배임 금액 공시 규모가 증가 추세
 - › 자산 가격 급등으로 임 · 직원의 횡령 동기 발현이 증가한 시기적 특성
 - › 新외감법 시행에 따른 외부 적발 통제의 강화
- 자산 2조원 이상 최초 처치집단(Treat 1st)의 횡령 · 배임 금액은 추세적으로 감소
 - › 2020년 부터 감사를 받은 5천억원 이상 집단(Treat 2nd)의 경우도 하향 안정화 추세



횡령 · 배임 금액 통제 효과의 추이(2)

- 사건연구 이중차분(Event Study DiD) 분석 결과 부정 규모 통제 효과를 재확인
 - › 시기 · 집단에 따라 처치 효과에 이질성이 존재하는 경우, TWFE 추정치에는 부적절한 비교로 인한 편의(bias) 발생 (Roth et al. 2022)
 - 사건연구 이중차분 모형을 활용한 분석과 Callaway & Sant'anna (2021) 추정량 확인 필요



감사보수 상승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는 유의적인 감사보수 상승 요인으로 파악

› 인증수준 상향 시 평균적으로 2.1억원 상승 (1% 유의수준)

- 5천억원 미만 기업이 61% 상승하는 동안 2조원 미만 5천억원 이상 기업 89%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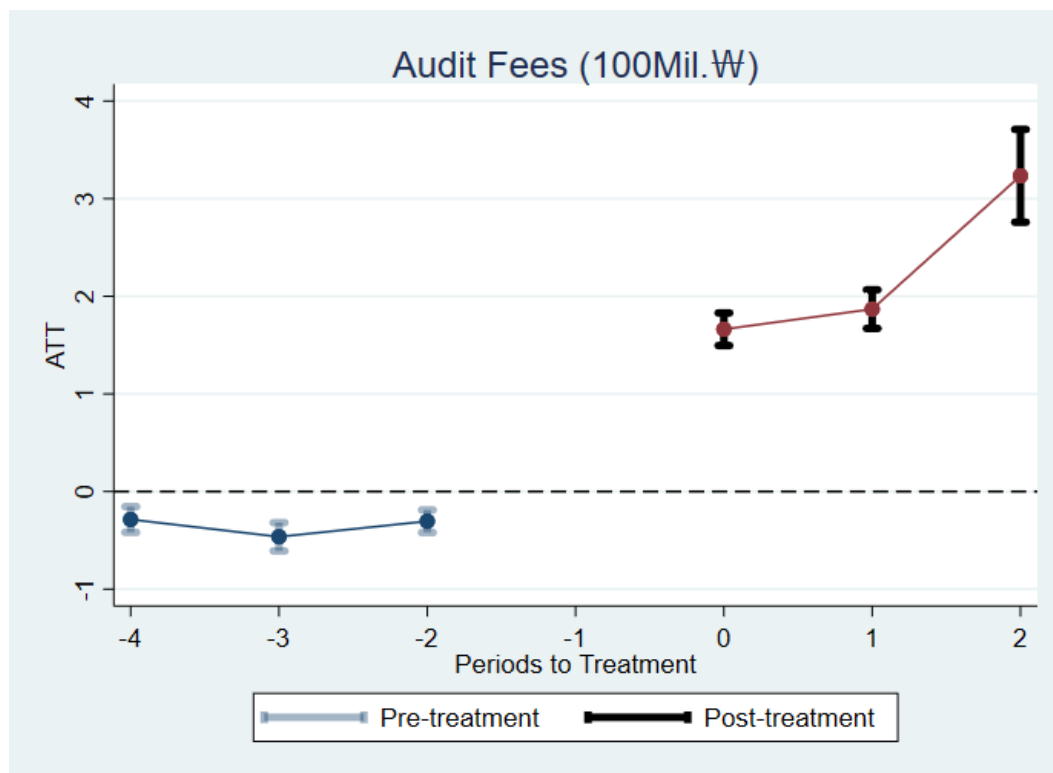
감사보수 (단위: 억원)	[처치] 2조원 이상 [통제] 5천억원 미만		[처치] 2조원 미만 5천억원 이상 [통제] 5천억원 미만		전체 표본	
	(1)	(2)	(3)	(4)	(5)	(6)
Treat	5.2041*** [0.382]	5.0289*** [0.335]	1.1181*** [0.058]	1.1265*** [0.059]		
Post	0.4574*** [0.013]	0.2785*** [0.019]	0.5146*** [0.015]	0.7072*** [0.018]		
Treat×Post	3.0935*** [0.247]	3.1201*** [0.247]	1.2343*** [0.068]	1.2396*** [0.067]	2.1092*** [0.109]	2.1258*** [0.108]
Constant	0.7894*** [0.010]	0.5793** [0.288]	0.8465*** [0.011]	0.9081*** [0.094]	1.0940*** [0.017]	-1.1282 [1.021]
Observations	9534	9534	10141	10141	10840	10827
Adj. R-squared	0.655	0.683	0.448	0.470	0.489	0.505
Controls	No	No	No	No	No	Yes
Fixed Effects	No	Year, Ind	No	Year, Ind	Year, Firm	Year, Firm

주 : 1) ***,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괄호 안 표준오차는 기업별 오차항의 군집(clustering)에 강건한 방식으로 산출(Petersen, 2009)

감사보수 상승 (계속)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는 유의적인 감사보수 상승 요인으로 파악
 - › 인증수준 상향 시 평균적으로 2.1억원 상승 (1% 유의수준)
 - 5천억원 미만 기업이 61% 상승하는 동안 2조원 미만 5천억원 이상 기업 89% 상승



감사시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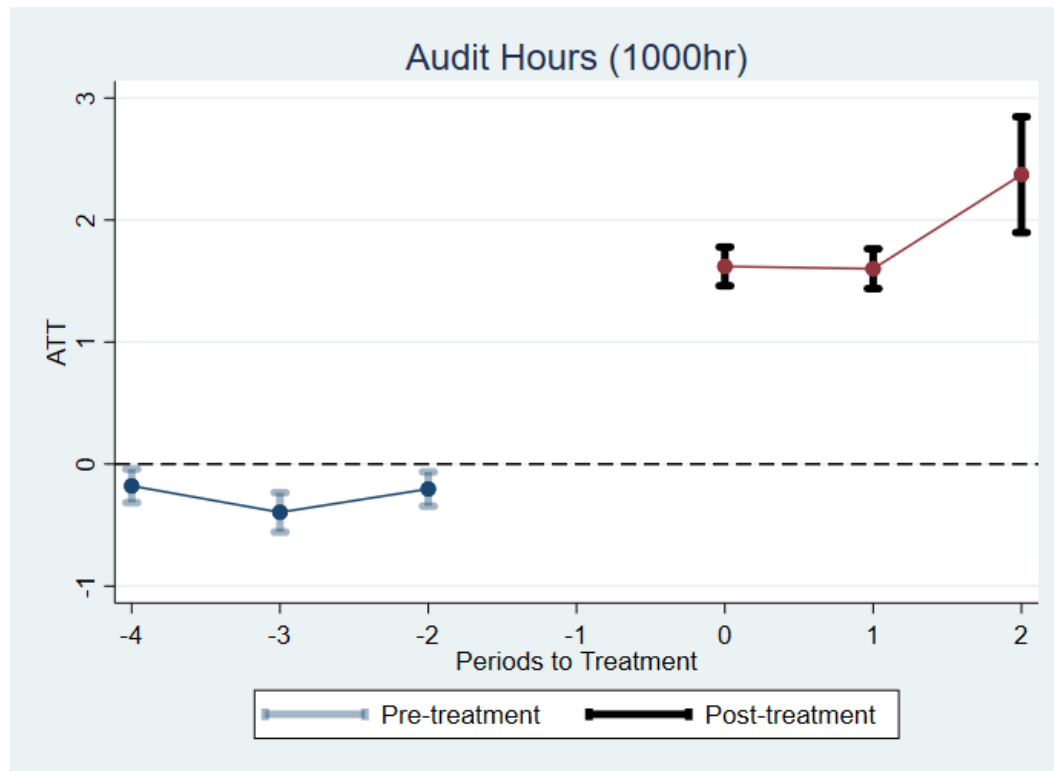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는 유의적인 감사 투입시간 증가 요인으로 파악
 - › 인증수준 상향 시 평균적으로 1,855시간 증가 (1% 유의수준)
 - 2조원 이상 기업 평균 35% 상승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표준감사시간 가산율: 30 → 35 → 40% ('22년 개정안內 삭제)

감사시간 (단위: 천시간)	[처치] 2조원 이상 [통제] 5천억원 미만		[처치] 2조원 미만 5천억원 이상 [통제] 5천억원 미만		전체 표본	
	(1)	(2)	(3)	(4)	(5)	(6)
Treat	6.6588*** [0.491]	6.4487*** [0.408]	1.5474*** [0.065]	1.5536*** [0.066]		
Post	0.2562*** [0.010]	0.2708*** [0.020]	0.2564*** [0.010]	0.4168*** [0.016]		
Treat×Post	2.4603*** [0.270]	2.4995*** [0.261]	1.0386*** [0.064]	1.0401*** [0.063]	1.8548*** [0.102]	1.8556*** [0.101]
Constant	1.0459*** [0.013]	0.7798** [0.340]	1.0893*** [0.012]	1.0613*** [0.098]	1.4838*** [0.017]	-3.1287*** [0.915]
Observations	9534	9534	10141	10141	10840	10827
Adj. R-squared	0.661	0.688	0.514	0.532	0.425	0.456
Controls	No	No	No	No	No	Yes
Fixed Effects	No	Year, Ind	No	Year, Ind	Year, Firm	Year, Firm

주 : 1) ***,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괄호 안 표준오차는 기업별 오차항의 군집(clustering)에 강건한 방식으로 산출(Petersen, 2009)

감사시간 증가 (계속)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는 유의적인 감사 투입시간 증가 요인으로 파악
 - › 인증수준 상향 시 평균적으로 1,855시간 증가 (1% 유의수준)
 - 2조원 이상 기업 평균 35% 상승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표준감사시간 가산율: 30 → 35 → 40% ('22년 개정안內 삭제)



임률 영향 불분명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와 시간당감사보수로 측정한 임률 간 관련성은 불분명

› 新외감법 도입 이후 전반적인 시기상 효과는 확인

- '19년('20년) 이후 시간당 1.5만원(1.9만원) 상승 (1% 유의수준)

시간당감사보수 (단위: 만원)	[처치] 2조원 이상 [통제] 5천억원 미만		[처치] 2조원 미만 5천억원 이상 [통제] 5천억원 미만		전체 표본	
	(1)	(2)	(3)	(4)	(5)	(6)
Treat	-0.0525 [0.144]	-0.1435 [0.159]	-0.5195*** [0.123]	-0.4763*** [0.126]		
Post	1.5496*** [0.069]	0.4135*** [0.087]	1.9383*** [0.075]	2.1950*** [0.100]		
Treat×Post	0.0293 [0.147]	0.0310 [0.148]	0.0927 [0.167]	0.1105 [0.166]	-0.0980 [0.128]	0.0309 [0.124]
Constant	7.8765*** [0.062]	8.6162*** [0.371]	8.0002*** [0.056]	8.7541*** [0.382]	7.7709*** [0.054]	16.5011*** [3.018]
Observations	9534	9534	10141	10141	10840	10827
Adj. R-squared	0.067	0.107	0.101	0.115	0.202	0.237
Controls	No	No	No	No	No	Yes
Fixed Effects	No	Year, Ind	No	Year, Ind	Year, Firm	Year, Firm

주 : 1) ***,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괄호 안 표준오차는 기업별 오차항의 군집(clustering)에 강건한 방식으로 산출(Petersen, 2009)

재량적 발생액 영향 불분명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와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으로 측정한 재무제표 감사품질 간 관련성은 불분명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와 재무제표 감사품질 개선 간 유의한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한 김태중 등(2021)과 일관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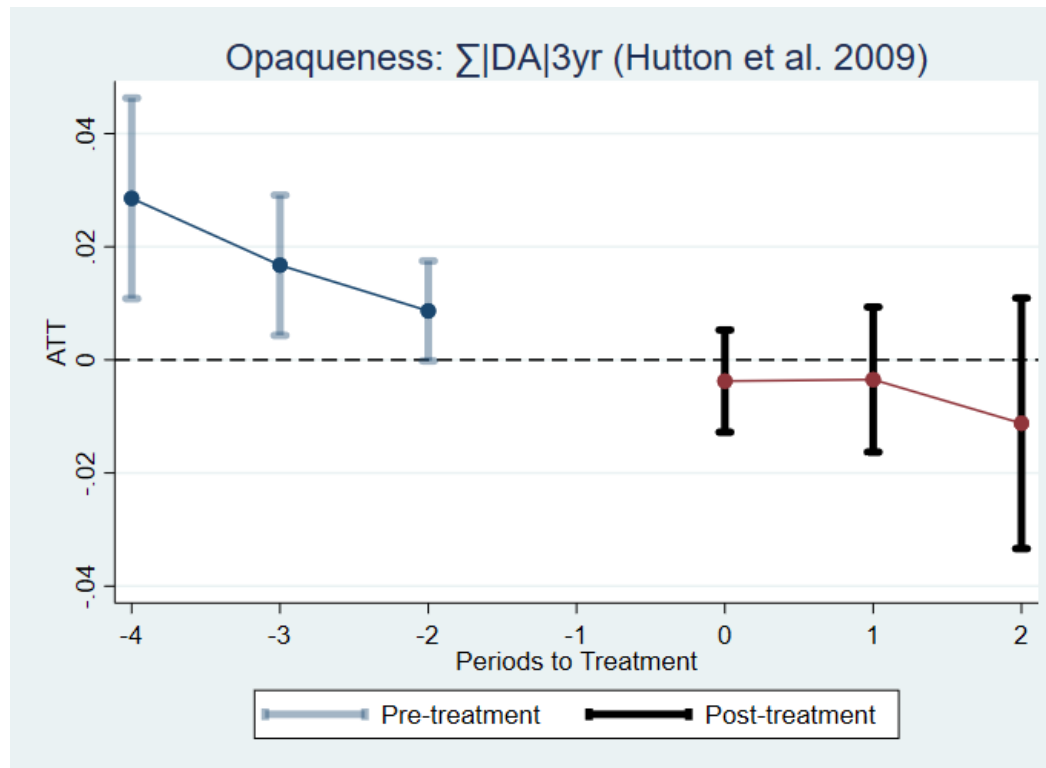
재량적 발생액	[처치] 2조원 이상 [통제] 5천억원 미만		[처치] 2조원 미만 5천억원 이상 [통제] 5천억원 미만		전체 표본	
	(1)	(2)	(3)	(4)	(5)	(6)
Treat	-0.0258*** [0.003]	-0.0208*** [0.003]	-0.0239*** [0.002]	-0.0165*** [0.002]		
Post	0.0070*** [0.001]	0.0063*** [0.002]	0.0042*** [0.002]	0.0033 [0.002]		
Treat×Post	-0.0039 [0.004]	-0.0037 [0.004]	0.0012 [0.004]	0.0012 [0.004]	-0.0007 [0.003]	-0.0008 [0.003]
Constant	0.0675*** [0.001]	0.0891*** [0.008]	0.0697*** [0.001]	0.0949*** [0.008]	0.0648*** [0.001]	-0.3466*** [0.096]
Observations	9249	9249	9885	9885	10506	10495
Adj. R-squared	0.011	0.051	0.013	0.054	0.003	0.072
Controls	No	No	No	No	No	Yes
Fixed Effects	No	Year, Ind	No	Year, Ind	Year, Firm	Year, Firm

주 : 1) ***,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괄호 안 표준오차는 기업별 오차항의 군집(clustering)에 강건한 방식으로 산출(Petersen, 2009)

회계투명성 제고 가능성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와 재량적 발생액 절댓값의 3개년 합산으로 측정한 회계불투명성 간에는 유의한 음(-)의 관련성 (5% 유의수준)
 - ›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재무보고 품질 개선과도 연계될 가능성



강건성 분석

- 성향점수에 따라 1:1 대응표본을 구성한 분석
- 외부감사인 적발 개연성이 높은 1~3월 횡령 · 배임 공시 사건을 제외한 분석
- 처치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반증 검증
 - › 처치 이후 조기 처치 집단과 후속 처치 집단 간 비교

소결: 부정방지 효과의 확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의 부정방지 효과를 부정하기는 어려움
 - › (이론적 측면) 검토 대비 검증절차상 이점
 - 문서 위조를 동반한 예정된 잔액 확인 절차의 대비
 - 업무 수행 간 권한 남용이 가능한 내부 통제의 허점을 이용하는 행위 등
 - › (실증적 측면) 제도의 시행 특성을 고려한 모형 설정 시 부정 발생의 유의적 감소를 확인
 - 자본시장 전반의 추세적 하락과 처치집단에 의한 유도를 다각도로 검증
 - 횡령·배임의 규모 측면에서 더욱 강건한 억제 효과를 확인
- 기업의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 역시 부정하기 어려움
 - › 과거 표준감사시간 지침에 의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간의 일률적 가산 가능성
 - 단, '22.1 개정 표준감사시간 상세 지침에는 명시적인 가산율 규정 삭제

3

실효성 제고 방안

고액의 횡령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세분화

- 횡령 범죄에 대한 기본 법정형 및 양형기준은 영국 · 미국 입법례와 유사한 수준
 - › 선고할 수 있는 최대 법정형 자체는 해외 주요국 수준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음
 - 범죄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무기징역 선고 가능
 - › 단, 고액의 횡령 사건에 대해 양형기준이 세분화 · 계량화되어 있지 않은 측면
 -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에 대한 1심 판결문 中 “양형기준에 따르면 횡령 · 배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본 구간은 5~8년, 가중 구간은 7~11년을 권고 …… 해당 범행은 법률 규정과 양형기준을 무색하게 할 만큼 거액” (2022고합37)
- 미국(연방)의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양형기준의 세분화 · 계량화 검토
 - › 고액의 횡령에 대해서도 피해 손실액에 따라 세분화한 양형기준 제시
 - 형량의 비례적 증가, 범죄 전과 및 피해자 수와 피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적용 단계를 가중

美 연방정부의 격자식 양형기준표(Sentencing Table)

Offense Level	Criminal History Category (Criminal History Points)					
	I (0 or 1)	II (2 or 3)	III (4, 5, 6)	IV (7, 8, 9)	V (10, 11, 12)	VI (13 or more)
Zone A	1	0-6	0-6	0-6	0-6	0-6
	2	0-6	0-6	0-6	0-6	1-7
	3	0-6	0-6	0-6	2-8	3-9
	4	0-6	0-6	2-8	4-10	6-12
	5	0-6	0-6	4-10	6-12	9-15
	6	0-6	1-7	2-8	6-12	9-15
	7	0-6	2-8	4-10	8-14	12-18
	8	0-6	4-10	6-12	10-16	15-21
	9	4-10	6-12	8-14	12-18	18-24
Zone B	10	6-12	8-14	10-16	15-21	21-27
	11	8-14	10-16	12-18	18-24	24-30
Zone C	12	10-16	12-18	15-21	21-27	27-33
	13	12-18	15-21	18-24	24-30	30-37

피해액의 추징 집행력 제고

- 횡령 재산의 신속한 몰수 · 추징이 가능하도록 범죄수익 몰수 · 추징제도의 개선
 - › 우리나라 형법, 몰수 관련 특례법 대비 미국 “조직범죄법”, “부패조직범죄처벌법”의 차별적 특성
 - (몰수대상 범위의 포괄성) 법 위반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습득한 재산, 법 위반을 통해 설립 · 운영한 단체가 얻은 이익 등까지 몰수대상을 포함
 - (원칙적 몰수, 예외적 배제) 제3자의 재산이라 보이더라도 몰수를 진행한 후 제3자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 · 증명하여 몰수절차로부터 배제될 수 있도록 규정
 - (법적용의 높은 강제력) 유죄입증이나 공범입증이 용이하도록 하여 ‘착수동의’ 수준의 증명이 있는 경우 유죄로 하거나 공범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법적용의 강제력이 높은 특성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일시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한시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
 - ▶ 효율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은 기업의 회계 및 세무 투명성에도 직결되어, 정부의 세수 확보 및 징세비용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내부통제제도상 중요한 취약점을 지닌 기업은 조세투명성 역시 낮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음 (Bauer, 2016)
 - 중소기업의 경우 보다 높은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조기에 정착시킬 필요성
 -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에 소요되는 외부컨설팅 비용 및 자체구축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도입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법인의 주도 하에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부 컨설팅 비용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세액공제의 항목으로 적용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ESG 관련 임직원 교육 및 경영수준 진단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보다 높은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조기에 정착시킬 필요성
 -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외부구축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구축하는 경우에도 형평성을 위해 자체구축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참고)

실효적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내부통제의 충실한 설계 · 운영 입증 시 경영진의 제재 경감 조항을 명문화
 - › 해외 주요국의 경우 금융사고 발생 시 내부통제 운영 수준이 제재 경감의 주요 근거
 - 금융회사 임직원이 행정 규제 및 규정 등을 위반하여 인적 · 금전적 제재를 받더라도 내부통제제도를 충실히 마련한 것으로 입증하면 제재를 경감 (이호섭 · 이석훈 · 안수현, 2022)
 - ›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제도 실효성 강화에 인적 · 물적 자원을 배분할 경제적 유인 제공

〈내부통제제도의 유인부합적 활용〉

	한국	미국	영국	일본	규제 격차
제재 경감 수단	경미한 제재시 가능, 중요사안 미적용	내부통제 충실 마련시 제재 경감 (사후 개선도 가능)	내부통제 충실 마련시 제재 경감 (사후 개선도 가능)	-	대(大): 한,일>영,미

자료: 이호섭 · 이석훈 · 안수현, 2022, 『주요국 내부통제 제도 현황 및 한국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향』

실효적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계속)

-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무력화되는 경우 감독책임을 무겁게 적용하여 관리와 운영에 책임이 있는 자가 확고한 의지(tone at the top)를 가질 유인을 강화
 - › 외부감사법 상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담당 임직원, 감사(위원) 등에는 중과실 책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의한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Ⅲ.2.가.2)
 - › 최근 대법원은 담합행위에 대한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인정함에 있어 내부통제제도의 충실한 설계와 실효적 운영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음
(황현영, 202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사외이사도 예외 아님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 279347 판결)

〈대법원 판례 상 실효적 내부통제제도의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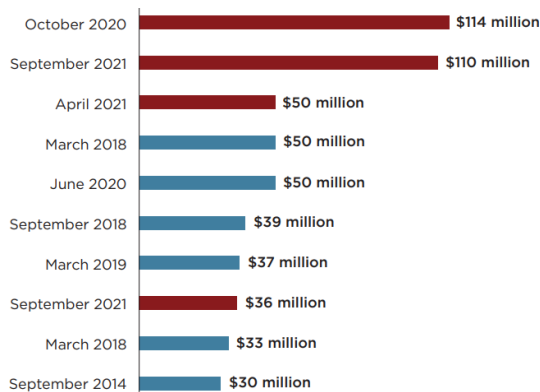
- ✓ (감시의무의 이행 요건) 고도로 분업화된 회사의 대표이사는 ①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②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③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④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내부통제제도를 마련한 경우 감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 ✓ (감시의무의 위반 요건) ① 내부통제제도의 충실한 구축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②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위법하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감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자료: 황현영, 2021,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연구

내부고발 인센티브 확대

- 고액 부정 사태에 대해 내부고발 유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금전 보상의 비례성 강화
 - › 미국은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로 회사에 \$1 million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과징금의 10~30%를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
 - 기 공시된 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제보일지라도 부정적발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경우 대규모 포상금 지급
 - 관련 제도의 시행으로 회계부정의 발생 가능성이 12~22% 감소한 것으로 평가 (Berger & Lee, 2022)

〈美 내부고발자 포상금 상위 10위〉



자료: SEC, 2021, Whistleblower Program

〈 Dodd-Frank 내부고발 프로그램 효과 분석 - 2011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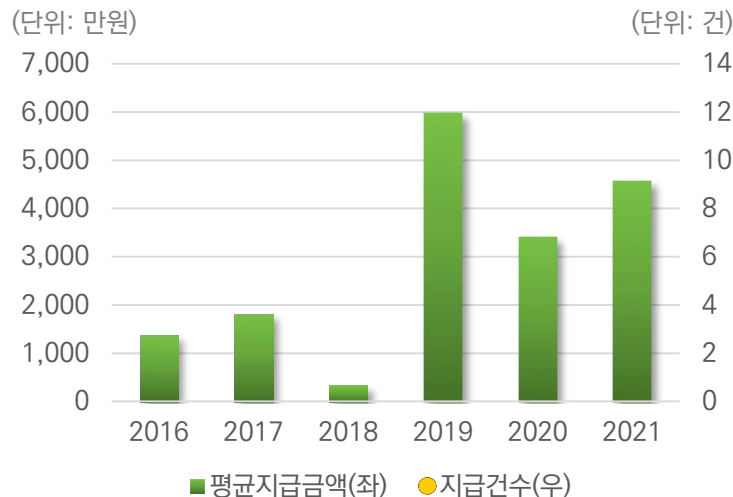
Sample period	Dependent Variable: F-SCORE				
	Unweighted	Unweighted	Entropy-balanced	Unweighted	Entropy-balanced
VARIABLES	(1)	(2)	(3)	(4)	(5)
NoFCA_G×POST	-0.184*** (-3.630)	-0.124** (-2.576)	-0.217*** (-3.319)	-0.126** (-2.531)	-0.233** (-2.175)
Observations	11,670	11,670	11,670	8,528	8,528
Adjusted R-squared	0.550	0.606	0.441	0.635	0.460
Firm FE	Yes	Yes	Yes	Yes	Yes
Year FE	Yes	Yes	Yes	Yes	Yes

자료: Berger & Lee (2022) Table 5. Effect of Dodd-Frank Whistleblower Program on F-score

내부고발 인센티브 확대 (계속)

- 고액 부정 사태에 대해 내부고발 유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금전 보상의 비례성 강화
 - ›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고발 유인을 지속 강화해왔으나 현행 보상의 최고한도는 20억원
 - 자산 5,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부정 신고 및 기여율 100% 인정 시 최고한도 수령 가능
 - › 투자자보호기금 설립을 통해 회사의 과징금을 내부고발 포상금의 재원으로 활용
 - 현행 과징금은 위법행위 중요도에 따라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에 최대 20%까지 부과 가능
 - 내부고발 포상금을 과징금에 비례 적용하여 고액 부정 사태의 내부고발 유인을 극대화할 필요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3.17

〈부정행위 중요도별 포상금 기준금액〉

구분	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주된 조치	기준금액 (만원)
1등급	고의Ⅱ단계 이상의 조치	100,000
2등급	고의Ⅲ ~ Ⅴ단계 조치 (중과실 가중시 최대조치 포함)	50,000
3등급	중과실Ⅰ ~ Ⅴ단계 조치 (과실 가중시 최대조치 포함)	30,000
4등급	과실Ⅰ ~ Ⅲ단계 조치 또는 경고 또는 주의 (고의 감경시 최소조치 포함)	3,000

주 : 자산총액(개별·별도) 5천억원 이상인 경우 상기 금액의 2배를 기준금액으로 산정
 자료: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기업 이행부담 완화 방안 마련

- 전반적인 개혁 기조는 유지하되 기업의 이행부담 완화에 대한 논의도 지속할 필요
 - › 미국의 경우 Bio 기술성장 기업을 중심으로 소규모 상장회사들이 형식적 요건과 무관하게 보완통제를 충실히 갖추고 실제 재무제표의 재작성 비율이 여타 상장기업 대비 유의적으로 낮음을 실증적으로 입증 (Lewis & White 2019)
 - 해당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SOX 404조 적용의 완화 필요성을 주장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효과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행부담의 완화 방안 검토
 - 보다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실효적인 내부통제제도 구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미국 Bio 기술성장 기업의 재무제표 재작성 관련 회귀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Bio-EGC	-0.017* (-1.79)	-0.032*** (-3.22)	-0.036*** (-2.95)	-0.033*** (-2.96)	-0.035*** (-2.97)	-0.033*** (-2.76)	-0.044*** (-2.96)	-0.042** (-2.48)
Includes Non-Accelerated Filers	Yes	No	No	No	No	No	No	No
Includes Accelerated Filer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Includes Large Accelerated Filers	Yes	Yes	No	Yes	Yes	Yes	No	No
Requires Manager ICFR	No	No	No	Yes	Yes	Yes	Yes	Yes
Industry Fixed Effects	No	No	No	No	No	No	No	Yes
Adjusted R ²	0.016	0.019	0.018	0.019	0.019	0.020	0.019	0.022
Number of Firm Years	28,267	21,012	8,377	19,913	19,913	19,913	7,800	7,800

자료: Lewis & With (2019) Table 9. Financial Restatements of Bio-EGCs and Other Listed Issuers



감사합니다